

#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의 현재와 미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최창학

## 1. 서론

오늘날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정부의 운영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정부 사업은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수행한 11대 과제에 대한 사업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이란 비전을 설정하고 4대 분야 10대 아젠다, 31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 전자정부 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정책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전자정부 사업의 주무부처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그동안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서 소홀히 다루어진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부의 기능 및 업무흐름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과정과 업무의 제거(Elimination), 복잡한 과정의 단순화(Simplification), 중복업무의 통합(Integration) 등 광범위한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내부적 효율성 향상이나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향상의 차원을 넘어서 전자정부를 통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보자원관리 혁신이다. 그동안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되어 온 정보자원 및 통신망에 대한 과감한 통합화를 추진하는 통합전산환경 구축과 통신망 고도화 및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EA: Enterprise Architecture) 등 정부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정보기술체계 확립에 관하여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처 단위로 시스템 구축 중심의 정보화전략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이고, 아울러 성장전략에서 성숙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시스템 확충이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국가불류종합정보서비스, 전자무역서비스,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전자정부 솔루션 해외진출지원 등 기업을 위한 전자행정서비스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대 기업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고 IT 산업육성과 전자정부 사업을 연계추진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그동안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다소 소홀하였던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준비를 완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등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인증, 암호기술 활용과 시스템 침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국가운영에 있어서 광범위한 국민참여가 가능한 새로운 민관협치체(Governance)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의 기초와 주요 내용

### 2.1 전자정부 정책의 기초와 전략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종이문서 방식의 업무처리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처리 방식을 서비스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하고 있다. 대 국민 서비스 혁신과 관련하여 기관별 창구, 방문, 대면처리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을 단일창구로 흡수하며, 무방문,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개선하고, 정보기술을 여론조사, 주민투표, 전자선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자적 참여수준까지 확대할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자원관리 부문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화, 고도화를 추진하고, 표준화와 상호연계성을 강화한다.

주요 추진전략은 첫째로 행정개혁과 전자정부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는 과거 전자정부 사업들이 행정개혁과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측면을 고려했던 것이다.

둘째로는 업무혁신과 정보화의 선순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분석과 행정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등 업무절차의 혁신과 병행하여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핵심추진과제, 위원회중점관리과제, 부처별추진과제로 유형화하여 추진하고, 프로젝트 실명제를 도입하며, 성과지표를 사전에 제시하는 한편, 사업성과와 인사, 예산을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책임성과관리제를 도입한다.

넷째, 전자정부 사업에 첨단 정보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자정부 사업과 IT 산업육성을 연계한다.

전자정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기획, 조정, 평가 기능을 담당하며, 행자부가 지원역할을 담당하고, 각 부처들이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 및 사업에 관한 전담지원기관으로서는 한국전산원이 담당하고, 각 사업의 주요계획과 추진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지속적인 환류과정을 거치게 된다.

## 2.2 전자정부 사업의 주요 내용

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은 대통령 공약과제, 위원회 발굴과제, 부처 제출과제, 각계 제안과제를 종합한 다음, 이를 정부혁신과의 연계성, 국가 경쟁력 제고효과, 국민적 수요 충족도, 실현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검토 심의를 거쳐 전자정부 로드 맵을 완성하였으며, 국정과제회의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 2.2.1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G2G)

#### 가.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을 위해서 문서 생산부터 보존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 하는 한편, 주요 대장을 DB화 하고, 이와 병행하여 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전자문서 대장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재정, 예산, 인사 등 기존의 공통행정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감사, 공보, 국제협력 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시군구 정보화 사업을 기반으로 광역시와 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연계시킨다.

#### ○ 주요내용

-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 전자공문서의 안정적인 수·발신체계를 확립하여 행정기관 내부는 물론, 기관상호간 전자문서 유통을 시행하고, 생산부터 이관·보존까지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및 정부 기록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 시스템간 연계표준 등 전자문서시스템 관련 표준규격을 고시하고,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 규정에 적합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한다.

- 전자지방정부 구현 : 시·도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시·도-시·군·구와 연계하는 한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 인사행정종합정보화 : 인사·교육·채용·급여·후생복지 등 인사부문의 전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시스템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로 확산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각기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서 인사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인사자료의 종합적인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부문에 표준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연계하여 세입, 세출, 재정분석 등 국가 재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실시간 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재정의 경우 이미 재정부문에 있어서 실시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시스템간 통합 연계, 지방재정부문에 대한 업무재설계 및 제도개선,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기반의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중앙재정부문과의 연계를 추진하며,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재정분석 및 재정위험관리체계를 구현한다.
- 전자국회 구현 : 국회활동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전자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IT를 활용한 국민참여 활성화, 네트워크 국회(국회와 행정부간, 국회가 국민간, 국회와 지방의회간 등) 구축, 지식경영 및 관리체제 구축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정활동 서류제출 전자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결산자료(국회, 예산처, 감사원, 재정경제부)와 법령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 외교통상 정보화(e-Diplomacy) : 외교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정보공유 및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 외교역량을 극대화, 대 국민, 기업대상 민원서비스와 정보 제공, 민의수렴, 국내외국민 대상 외교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의의와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광역외교망, FATIS, 홈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 주요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의 추진현황을 관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을 위한 전자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국정과제와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전자적 관리시스템이다.
-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 형사사법 정보관리에 있어 사건기록 송치(경찰, 관세청, 국정원, 국세청 등), 수사(검찰), 공판(법원), 집행(법무부)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기관별로 분산 구축 관리되어 형사사법 기관 간 수사자료에 대한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형사사법 기관간 통합수사자료 정보망, 통합시스템 및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통합형사사법 포털 구축, 신원증명서, 출국가능사실 증명 등 각종 형사사법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를 위하여 대대적인 DB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기관간 민원첨부서류 제출을 폐지하도록 하고,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시키고 이를 통한 정책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 ○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유 확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기관간 공동이용을 활성화하여, 민원서류 감축 및 다 부처 관련 민원의 일괄처리(seamless)를 지향하면서 향후 공공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정보 화일목록 DB 및 정부디렉토리, 표준코드관리, GPKI,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기반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공동이용에 따른 이용기관 간 책임소재, 사생활 보호, 보안관리 강화 등 기술적·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 다. 서비스 중심의 업무재설계

정부기능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기능연계 모델을 개발하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작업 및 업무 재설계, 상시적인 기능조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정보화 대상 과제 발굴 및 시스템 구현과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 ○ 주요내용

- 정부기능연계모델 개발 : BRM(Business Reference Model)은 정부기능을 목적, 타 기능과의 관계, 수혜자, 하위 기능 등을 분류하고, 담당조직과 근거법령, 담당자, 규제, 예산의 상호관계를 즉시 파악하여 업무수행에 참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2.2.2 대 국민 서비스 혁신(G2C, G2B)

### 가. 대 국민 서비스 고도화

전자민원 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하여 우선 전자민원 서버 스펙을 확대하고 전자민원 단일창구를 고도화하는 한편,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확대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며, 민원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대 국민 포털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용, 취업, 식품, 의약품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며, 재난 소방 등 안전관리 업무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기상, 철도, 해양 등과 연계 한다

##### ○ 주요내용

- 인터넷 민원 서비스 고도화 : 인터넷 민원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민원 업무처리의 생산성과 민원인의 편의 향상,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을 추진한다. 민원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주요 분야의 민원 중 전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인·허가/관리/감독업무 등 대국민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하여 복합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 설계도 작성·건축허가·관계기관간 협의·사용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건축·주택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건축행정의 생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토지, 대법원 등 유관기관간 상호연계하며, 건축관련 이용주체(공공, 민간)가 건축관련 정보를 다양하고 신속하게 이용토록 하는 사업이다. 건축 행정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보급 완료하였고, 건축행정웹 포털, 건축행정인트라넷, 건축행정DW, 유관기관연계, 건축행정적법성진단 등 단계적으로 건축행정정보화고도화를 추진하며, 건축물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의 과정을 전자화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건축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및 등기와도 연계된다.
-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의약품 관련 대 국민, 대 기업 정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식의약품정보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식품 유관부처간 식품정보 공유 및 정보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 국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 구축된 복지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단일창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복지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복지관련 유관부처간 복지정보를 연계·활용한다.

-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민원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대국민 서비스 체계가 운영되고, 국세 CRM 도입, 종합분석시스템(D/W),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홈택스서비스(HTS) 1단계,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전자신고, 전자고지 및 납부, 인터넷 민원신청 및 증명발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S 3단계 사업은 전자신고 세목(법인세, 소득세, 교육세) 및 전자민원 대상 확대로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웹 콜센터 구축 및 시스템 보안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세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도입은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자료를 취합·분석하게 되며, 추정수입금액 산정시스템, 납세자 유형별 납세금액 추정시스템 등 세원예측에 대한 선진화는 물론 금융자산 인별 DB 구축 등 세원추적 고도화를 구현하고, D/W를 활용한 조사업무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홈페이지와 HTS의 통합, G4C 시스템과의 연계 체계 구축, HTS와 국세통합정보시스템(TIS)과의 연계, 대민접촉 채널의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취업, 직업, 훈련, 고용보험 등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상호연계하고 인적자원 관련 기관 간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인력개발 지원서비스를 수요자 위주로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노동시장 정보서비스의 내용을 정보이용자별, 취업주기별, 주제별로 다양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기관과 정보연계 및 공유체계 구축한다. 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 취업지원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윈스탑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신고용보험시스템을 구축하며, 인적자원 관련 기관 간 정보공동 활용 및 대국민 노동시장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 기존 행정심판제도는 심판 청구서가 종이문서의 형태로 처분청에 접수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청에 대한 의결서 통보, 재결청의 청구인 및 처분청에 대한 재결서 통보가 중

이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접수, 심리·의결·재결에 관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보관·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도입을 통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며, 내부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해·재난 등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 피해복구, 사후 분석·평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안전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기본계획에 따라 예방 및 대비시스템(사전대비관리, SOP/Checklist, 교육, 훈련 등)교육, 대응시스템(피해상황, 일일상황, 재해상황판 등), 복구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정보화 추진한다. 2단계로 추진할 내용은 1단계 추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립, 재해/재난/소방분야 통합관리체계를 수립하며, 재해/재난을 전담할 기구 준비와 병행하여 통합상황실 및 정보지원센터 구축, 무선통신망 시스템 구축, 기관 및 관련 시스템간 통합연계 및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포함하고 있다.

#### 나. 대 기업 서비스 고도화

단일창구를 통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조세, 물류, 외국기업 관련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금융망, 무역망, 물류망 등 산업기간망에 대한 연계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정부 관련 솔루션에 대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 주요내용

- 기업지원단일창구(G4B) 서비스 :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는 기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포털 사이트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행정규제 완화 및 민원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업은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접촉하여야 하는 불편이 상존하고 있고, 관련 서류의 중복 제출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였다. 기업의 민원업무는 대부분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민원이고,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민원 서비스의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기관간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정하는 것이다.
-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혁

신을 통해 항만·통관·검역·공항 등 물류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고객 중심의 단일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물류 주체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표준화 등 물류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입출항, 수출입화물·통관보세운송관리, 검역, 철도화물 등 물류관련 기관 인허가 절차 전산화, 물류 EDI, 공차정보, 물류DB 서비스 등 물류종합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항만, 공항, 철도, 내륙화물기지,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정보화 추진, 항만물류 인허가민원 표준화 및 절차간소화, 유관망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물류 네트워크 및 서비스 통합을 추진한다. 현재 물류부문에 있어서 주체별 정보화 수준은 대체로 우수한 수준이나, 기관간 협업을 통한 절차간소화와 물류주체간 정보 공동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수출입화물의 흐름, 대상화물, 운송형태, 물류거점, 기존의 물류정보망 등을 고려하면서 6개 물류관련 기관이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 투자, 고용, 민원, 관광, 정보제공 등 외국인과 관련된 포털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부처별 현황은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군/구에서의 등록외국인관리, 민원관리 지원 및 정부기관과의 정보 공동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고용전산망 구축, 산자부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투자지원, 투자상담, 투자 상황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전자무역(e-Trade) 서비스 : 물류·금융 등 관련 분야 간 연계를 통하여 무역관련 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인터넷 기반의 윈스톱 무역프로세스 구현을 위해 '통합 e-Trade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이 인터넷 환경에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한다. 그동안 무역자동화 사업 추진 등으로 전자무역 기반은 조성된 것으로 평가되며,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초는 마련되었지만, 독자적인 추진해 온 무역·통관·물류망 등이 소관기관별로 분리 구축·운영되고 있어 전체적인 통합·연계를 통한 효율 개선을 추진한다.

**다.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확대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전자포럼의 도입, 온라인 여론조사, 전자주민투표제 도입, 전자선거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 제고 등 보편적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2.2.3 정보자원관리 혁신(공통기반)**

**가. 정보자원의 통합/표준화**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정보자원을 통합/연계하는 한편, 통신망을 통합/고도화하며, Mobile 환경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ITA)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 주요내용**

-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 그동안 각 부처별, 업무별로 각각 구축·운영해 오고 있는 각종 정보자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자원에 대한 안전성 확보(Security), 정보화 투자 및 전산운영의 효율성 제고(Save), 시스템 통합을 통한 다양한 정부 서비스의 개발과 질 개선(Service)을 촉진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기관 전산환경 현황 및 문제점 조사, 공통서비스지원, 기반시설지원, 통합백업 등 전산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델 및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 정보자원이 급증하고, 정보시스템이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정보자원 및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시스템간 연계·통합의 필요성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정보기술 아키텍처(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도입을 통해 정보기술 및 자원관리 및 활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표준화된 정보기술의 도입과 관리로 시스템간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고, 업무와 정보자원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정보화 투자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ITA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보기술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갖는 것으로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단절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ITA의 제도화를 위하여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을 제정하고, 예산심의 등에 ITA를 반영할 계획이다.

**나. 정보보호체계의 강화**

전자서명, 인증체계 정비와 병행하여 암호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 하며,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침해 사고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다.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종합적인 정보화 분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기

존인력의 재교육 및 재배치, 그리고 우수 민간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산운영조작을 정비하고, 아웃소싱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와 IT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 2.2.4 법제도 정비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전자정부 관련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며, 정보보호체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전자정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정보기술관리혁신법 제정과 전자정부 성과평가제 도입 등 전자정부 기반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3.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의 주요 과제

### 3.1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Governance 체계 구축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진과 관련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전자정부전문위원회), 행정자치부(전자정부국), 각 부처 혁신관리 및 정보화부서, 지방자치단체,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가, 업계 등 주체간 긴밀한 협치(Governance)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치체제의 구축과 운영이 미진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전자정부 사업이

개별 부처 차원에서 머물고 있거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업무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각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민간부문간 협력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아서 전자정부 사업의 효율성과 혁신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진기관간 전자정부 로드 맵이 담고 있는 개혁의 기초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과제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수직적·수평적 협치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협치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중인 각 부처의 CIO위상을 재정립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CIO가 간부회의에 참가하여 혁신과 정보화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부처 CIO의 협의체(중앙부처CIO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처 CIO 상호학습을 강화하며,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전자정부 관련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CIO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토의 후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동활용, 정보보호, 표준화, 성과관리 등 분야별로 관련부처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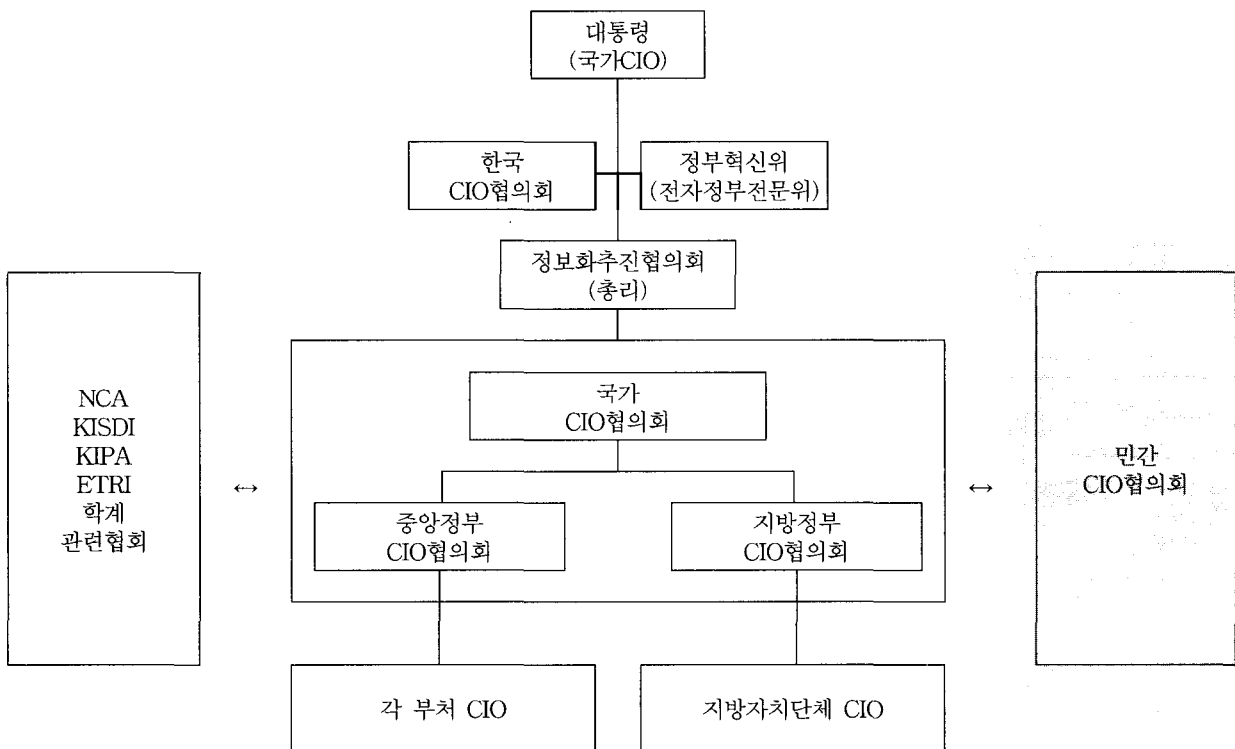


그림 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협치체제 구축방안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정부CIO협의회와 병행하여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16개 광역자치단체CIO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CIO협의회(가칭)'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자정부를 주제로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정부 Summit을 개최하는 등 정보화 수준 상호 비교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만들도록 한다.

'국가CIO협의회(가칭)'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전자정부 관련정책을 협의하는 최고의 기구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협조하여 정부혁신 및 행정수행에 IT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CIO Forum도 참여토록 하여 민·관협력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이들 '국가CIO협의회(가칭)'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관련기관들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매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산하에 국가적 차원의 전자정부 이슈를 담당하는 Working Group을 설치하는 한편, 매년 1회 중앙, 지방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의 CIO Summit을 개최하여 상호 교류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3.2 로드 맵의 재구성

전자정부 로드 맵은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에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과제를 발굴하여 추가하고, 어느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한 과제의 경우 주관부처로 이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로드 맵의 재구성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유선, 무선, 위성 등 다양한 정보인프라를 구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두도록 하고, 다부처관련 공통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을 보유한 역량 있는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활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부실패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정비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그동안 국가가 구축한 공공DB를 타 공공기관이나 은행, 비영리단체 등에 적절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권익과 업무처

리의 편의성이 균형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3 성과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공무원은 물론 다양한 시민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둔 균형성과관리(BSC) 등 최신 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전자정부 정책 수행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그 결과에 대하여 신속한 피드백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전자정부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기술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활용율을 제고하는데도 상당한 역점을 두어야 한다.

### 3.4 IT 산업발전과 연계 및 국제협력 촉진

그동안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의 시장창출로 연결시키고 나아가 IT산업 육성정책과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책수행과정에 우수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IT산업진흥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정부 정책은 범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UN, 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가와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행사를 적극 유치하는 등 정부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차원의 해외시장진출의 가교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의 기대 목표와 미래상

참여정부는 이러한 로드맵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전자정부 수준은 현재 부분적으로 전자적 거래가 가능한 4단계의 수준이 2007년경에는 5단계인 통합처리단계에 도달할 것이며, 세계 5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1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민원업무 온라인화 비율은 85% 수준으로 향상되며, 전자정부 활용율 역시 현재의 23% 수준은 60%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관청 방문 횟수 역시 연평균 10회에서 3회 이내로 감축될 것으로 예측되며, 전자투표와 전자선거 등 새로운 형태의 국민참여가 구현되고,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정부의 구현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지식기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전자정부는 구축은 목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즉, 전자정부는 국가 사회

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정부를 보다 국민 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장 적실성 있는 대안이며, 과거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민과 관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출발점임과 동시에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로운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재창조를 의미한다.

또한 전자정부의 구현은 e-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부문의 혁신, e-business와 e-shopping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과 산업부문, 유통과 물류부문의 혁신, e-leisure 등 여가생활과 문화 그리고 스포츠부문의 혁명적 변화 등 국가 사회전반에 걸친 혁신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혁명적 변화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존의 Off line 중심의 관료제적 정부와 On line 중심의 전자정부가 자연스럽게 상호 통합 연계되는 Ubiquitous 정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5. 결 론

로드 맵은 말 그대로 '길을 찾아 가는 지도'에 불과하다. 지도는 현실과 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정과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 맵은 정부출범이후 제한된 시간에 작성되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며, 빠른 정보통신 기술의 향상과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전자정부 로드 맵에 반영되지 못한 Ubiquitous 부문, GIS 관련부문, 국방관련 부문, Mobile 관련 부문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양한 국민적 수요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보완과 갱신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자정부 사업은 그동안 다양한 시스템 구축 등 양적 측면에서의 상당한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참여정부는 질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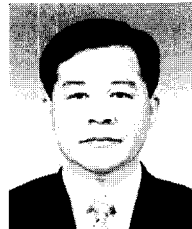
측면에서의 고도화, 통합화 그리고 성숙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전환기에 있으며, 지속적인 변화관리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여정부는 참여와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자정부 사업 역시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CIO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 선행과제로 다루어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가CIO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전자정부 정책추진에 있어서 수직적 수평적 협치기반을 마련하며, 정부혁신위(전자정부전문위)의 주관하에 국가CIO협의회, 학계, 업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전자정부 로드 맵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김성태, 전자정부론, 법문사, 2004.
- [2] 노무라종합연구소, CIO 핸드북, 문원출판사, 2000.
- [3] 조셉 S. 나이 편저,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2001.
- [4]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자정부백서, 2003.
-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 맵, 2003. 8.
- [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 로드 맵 세부추진계획, 2004. 3.

## 최 창 학



1993 대구대학교 행정학박사(PMIS전공)  
 1994 대구광역시 시정연구단 연구위원  
 1999~2003 대구광역시 CIO, 정보화담당관  
 2003~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장  
 관심분야: 전자정부, 정보화 전략, 행정철학  
 E-mail : rainmaker@president.go.kr

## • Proteome Informatics: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

- 일 자 : 2004년 11월 19일
- 장 소 : 기초과학지원연구원(대전)
- 주 최 : 바이오정보기술연구회
- 상세안내 : <http://www.ksbi.or.kr>